

한국 최초 위성발사체 최종 발사 허가

‘나로’ 7월 30일 쏜다

세계 10번째 위성 자력발사국 눈앞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인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나로호는 오는 7월30일께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되게 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가 개최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제출한 ‘나로호’ 발사허가신청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벌인 결과 발사허가를 결정된 원안대로 확정,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 인공위성 자력발사국이 된다.

그동안 교과부는 항우연이 지난 2007년 12월 제출한 나로호 발사허가신청과 관련, 한국과학재단과 우주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왔다.

이로써 항우연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과 등 국제적 발사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6월 중순 러시아로부터 발

사체 1단 부분을 인수하고 발사체·발사대 연계를 인증받는 등 마지막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나로호 발사일은 오는 7월30일 즈음이 될 예정이다.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7월초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항우연은 2일 대전 유성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나로호에 장착될 과학기술위성 2호를 공개했다. 이 위성은 교과부의 지원으로 지난 2002년 10월에 시작돼 항우연, 광주과학기술원,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등이 공동 개발했다.

대기와 해양의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관측기와 위성의 정밀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반사경이 탑재돼 있는 과학기술위성 2호는 길이 33.5m, 지름 2.9m, 중량 140t 규모인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쏘아져 지구복사에너지와 별 위치 측정 등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전세계에서 13번째로 건립된 우주센터인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이날 중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건강 봉사 책임지겠습니다”

‘빛고를 건강 봉사단’이 2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내 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봉사정신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500여명으로 구성된 빛고를 건강 봉사단은 오는 10일 개관하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시설, 프로그램 안내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정 독주 중단” 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100여명이 3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교수들은 3일 오전 11시에 교내 신양인문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선언의 요지는 “정부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아 일방적인 독주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해결이 지극히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교수들은 시국선언에 나서게 된 직접적 계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고 밝혔다. 준비 실무를 맡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 원칙 파괴로 말미암은 여러 결과 중 정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부터 문제의식을 느끼던 여러 교수가 더는 잘못된 일에 침묵하는 것은 동조와 다름없다고 판단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100여명의 교수가 동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조각 수준 개각 필요하다”

한 새신위 ‘골장토론’ 당·정·청 전면개편 요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민심 수습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 새신·소장파가 당정청의 전면개편을 요구한 반면 지도부와 청와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여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새신특위는 2일 ‘골장토론’을 열고 국정쇄신을 위해 조각 수준의 개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청와대에 건의키로 했다.

김선동 새신특위 대변인은 이날 브

리핑을 통해 “특위에서는 첫째 조각 수준의 국민통합형 내각 개편과 정부 변화에 상응하는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의 면모를 쇠신하기 위해 재보선 참패 등 일련의 사태를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신특위는 지도부 사퇴 이후 대책 가운데 하나인 조기 전당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추가 토론회를 거쳐 결

을 내린다는 방침이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임해규, 정두언, 차범진, 권택기, 김용태, 정태근 의원 등 당내 친이(친 이명박)계 소장파 7명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조와 국정 시스템 개편 ▲대통령의 정치와 인사 ▲당의 전면 쇠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 쇠신과 관련, “현 체제는 내부에 팽배된 패배주의를 물리칠 수도 연이어 다가오는 그 어떤 심판도 이겨낼 수 없다”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농어촌 소규모학교, 최첨단 ‘전원학교’로

110곳 선정 지원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친환경 ‘전원학교’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 110곳을 선정, 3년간 총 1천393억원을 지원할 내용을 담은 ‘전원학교 육성계획’을 2일 발표했다.

전원학교는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교 모델을 말한다.

선정 대상은 면 지역에 소재한 학생수 61명 이상 200명 이하의 초·중

학교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학교 안에는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잔디 운동장 등 자연 친화적인 시설들이 조성된다.

또 교실에는 전자칠판, 디지털 교과서, IPTV 등이 갖춰져 학생들이 첨단 이러닝(e-learning)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된다.

학교 선정은 도 교육청이 1차 평가를 통해 1.2배수를 추천하면 교과부가 7월 초에 최종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